데스크 시각

때아닌 교육감선거 논란에 부쳐

김 일 환
여론매체부장·편집 부국장

최근 평소 알고 지내던 교육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내년 광주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다. 1년 3개월이나 남은 선거를 논한다는 게 뜬구름처럼 느껴졌다. 원론적인 대답을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또 얼마지않아 중등 교장 출신 인사가 전화로 똑같은 질문을 했다. 필자의 의문은 커졌다. 현 교육감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러나?

불통의 폐해 심각

교육계 이곳저곳을 탐문해보니 내년 교육감선거에 나서려고하는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십수 명 이다. 몇몇 인사들은 공공연하게 출마의사를 표명하고, 물밑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우며 교육계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 불거져나온 때아닌 선거 논란은 그동안 광주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병폐의 골이 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교육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작금의 광주교육이 큰일났다고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도 한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단지 진보적 정책이 착근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는 상황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근래의 광주 교육계는 보수와 진보의 가름을 넘어서 해괴한 이분법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통(通)과 불통(不通)의 이분법이다. 여론 소통은 고사하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언로의 체증을 호소할 정도다. 언론이나 전문가가 내놓는 해법은 묵살되기 일쑤다. 소위 진보로 대변되는 그들만의 통(通)이 존재한다. 비근한 예를 들어 지난 2월 지역사회를 들썩였던 고교배정 문제나 인사문제가 그 불통의 산물이다.

교육청 내의 불통이 고질병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모라는 이름으로 발탁된 아랫사람이 상사를 좌지우지하고, 정책을 행하는 자들은 몸사리기가 다반사다. 함부로 말했다간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입을 다물고 지내는 간부들도 있다고 한다.

일선학교도 갈등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학교의 수장인 교장선생님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며 아우성이다.

최근에는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 자치조례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자치조례가 자율로 포장된 족쇄라고 말한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교육청을 맹비난하고 있다. 교장들의 손발을 묶어 학교를 이끌어가는 열정과 창의력을 말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압력단체의 입김에 따라 교육이 균형을 잃고 어느 일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선거 겨냥한 소통은 안돼

결국 이러한 불통과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다. '실력 광주'라는 자긍심은 사라 진지 오래다. 사립학교 선호현상을 막겠다고 행한 정책에 일부 학생들은 통학난을 겪고 있다. 보충학습 금지·0교시 금지 등 강요된 평준화교육은 성적하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4~5년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근 광주시 교육청이 쏟아내 놓는 정책들은 다음 교육감 임기 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들이 많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장기적 정책과제의 생명은 유연성과 균형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정책은 다른 한편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진보 쪽의 주장만이 통(通)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이라 함은 무수한 의견의 조탁을 통해 균형을 맞춰가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불통의 벽에 막혀 있다는 것이다.

내년 교육감선거를 논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정책들을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한쪽으로 질주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기울어진 균형의 추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풍문에 교육감이 최근 소통을 위한 행보를 하고있다고 한다. 귀를 열어 교육정책의 균형을 찾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년 선거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길 빈다. 선거를 겨냥해 소통하는 척, 타협하는 척 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남은 1년 3개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두루 여론을 경청하길 바란다. 그리고 수렴된 의견이 꼭 현재 입안하고 있는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 또 언론의 충고도 달게 듣길 바란다.

교육감선거에 입지하려는 인사들에게도 자제를 촉구한다. 광주교육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스스로 교육가치를 세우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갈등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보려는 것은 안 된다.

선거의 목적으로 교육계를 뒤흔드는 것은 공멸하자는 것이다. 자칫 1년이 넘게 남은 선거가 조기 과열돼 이전 투구양상으로 번져간다면 정작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기 고

제2의 천안함 피격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안 중 현
광주지방보훈청장

지난 3월 26일은 천안함이 피격돼 46 용사와 한주호 준위가 산화한 지 3주기다. 천안함 피격으로 산화한 장병에게 명복을 빌며 그 유족과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쾌유를 빌었다.

천안함이 피격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거친 바다 위로 드러난 두 동강이 난 천안함의 처참한 모습과 온 국민의 오열과 슬픔 속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모습 등…. 그러나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거쳐 북한도발로 결론이 난 것이 대해 갑론을 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안보의 현실을 우려했던 것들이 스쳐간다.

지난해 천안함 2주기를 맞아 실시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이 국민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피격이 언제 발생한 사실인지 아는 국민은 조사자의 43%였고 57%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천안함 3주기를 맞이하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첫째, 천안함 피격사건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에서 북한의 대남도발의 호전성(好戰性)이 6·25 정전협정 이후 60년이 지났으나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6개월 후 연평도 포격도발 행위와 국제적 반대여론에도 지난 2월의 핵실험 강행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김정은 세습체제가 지속하는 한 군사적 도발행위는 지속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둘째, 천안함 피격은 우리의 안보의식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하게 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국가라는 체제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보호체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35년간의 일제식민지 지배와 3년간의 6·25전쟁을 경험했다. 수많은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 국민이 잘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다.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해 전쟁억지력을 키우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수위를 높이는 시기에 굳건한 한미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안보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 오후 2시에 광주·전남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천안함 46 용사와 한주호 준위를 추모하고 안보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는 나라사랑 특별강연을 했으며, 정부합동 청사 및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등에서 '천안함 3주기 추모사진전'을 개최했다.

또한, 광주지방보훈청 블로그와 트위터에서는 46 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사이버 참배와 천안함 피격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SNS 퀴즈이벤트를 진행했다.

'국가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천안함 피격 3주기를 맞이하여 봄나들이도 좋지만 한번쯤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제2의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보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은펜칼럼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인재를 키워야한다

최 희 동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일찍 무너지고 있다. '다해 봤다'고 하며 5년을 망친 이명박 전 정부보다 불통과 인사난맥상이 더 심하다는 게 요즘 민심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새 정부이기에 실망이 더 큰 것 같다. 물론 정부조직법의 뒤늦은 통과를 그 이유로 댈 수 있겠지만 인재등용에 대한 허술한 검증과 지역차별은 별개의 문제다.

인사차별을 보면서 호남인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선거 때 호남을 방문하여 인사탕평을 주장하더니 결국은 우리를 속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율로 볼 때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또 5년을 팍팍하게 살게 되었구나하는 한숨이 나올 만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선산이 호남에 있으니 호남사람'이라는 대변인의 호남인관이 곧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염려다.

탕평은 한편만이 아닌 고른 인재의 등용에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호남인재는 무수히 많다. 자신의 캠프에서 수고했던 사람도 중요하지만 탕평을 하려면 중도에 서있었던 진정한 호남인재들을 발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탕평인사는 호남에 대한 배려가 아닌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소통과 통합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난 이명박 정부처럼 호남에 대한 홀대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호남인들은 이러한 소외를 그대로 지켜보면서 한탄만하며 또 세월을 낭비할 것인가? 이제 우리 호남도 달라져야 한다. 한숨으로 세월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와신상담의 자세로 인재를 키워 정권창출을 준비해야한다. 사기에 나오는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의 부차와 월나라 구천의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고사를 되새겨보자.

언제부터인가 호남은 인구가 영남에 비해 적기 때문에 대통령후보가 나와도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우리 스스로의 뇌리에 각인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키며 '인재 키우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3선, 4선 하면 마치 죄인 취급을 당하는 풍토도 생긴 것이다. 물론 나라와 지역을 위해 아무런 한 일이 없고, 능력과 자질마저도 부족하다면 당연히 뽑아서도 안 되고 재선을 시켜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라면 다선을 만들어 대통령 후보로도, 국회의장으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당이면 막대기라도 뽑는 지난날의 잘못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후진적 정치에서 탈피해야 한다. 안철수 현상은 바로 이런 정치에 대한 청산을 바라는 민심의 표출이다. 우선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당보다는 인물에 투표하자. 화려한 경력보다는 민심을 중시하며, 미래에 대한 혜안과 청렴과 염치를 아는 참신한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호남의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맹자는 군자의 삼락 중 세 번째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하를 통일하는 왕도의 구현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인재를 키우는 데 있다는 맹자의 말씀을 우리 호남인은 되새겨야 한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한부모 가정 우울증 상담 치료 프로그램 절실

예전에는 편모 또는 편부슬하라는 말을 많이 썼다. 그러나 그 말이 어감이 좋지 않아 지금은 한부모라고 고쳐 쓴다. 우리가 말부터 바꿔 쓰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겪는 고충이나 경제 혹은 정신적인 부분의 어려움이 적잖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 부분 또한 복지사회로 가는 방향 중 하나일 걸로 본다.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은 약 137만 가구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족들 중 적잖게 우울증이 있다고 한다. 즉 양부모 가정보다 우울증 같은 증세가 더 많다는 점이다. 사회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상담 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서울시 양천구에서 조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한부모가정의 우울 증상 비율은 25%였다고 한다. 이는 일반가정의 14.5%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이라 한다. 또 스트레스 지수도 양부모가정보다 월등히 높다고 한다.

한부모가정의 정신건강문제는 심리적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양육, 사회적 편견, 음주문제가 적잖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정의 아동들은 언어적, 신체적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다. 그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항상 우울, 자살, 알코올 의존도, 인터넷 중독 같은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전문의 상담과 진료를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정신건강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한부모 가정들이 겪는 정신적 물질적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고, 그 안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자·순천시 안풍동

社 說

성접대 사건 '광주' 매도, 이런 황당한 일이

건설업자 윤증천씨의 고위 공직자 성접대 의혹 사건이 광주 출신 조폭이 주도한 것으로 거짓 왜곡되면서 지역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윤씨나 협박에 가담한 박모씨가 타지역 인사인데도 사실 확인없이 광주 출신으로 사이버상에 무차별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 카카오톡 등에는 윤씨의 성접대 명단과 사건 개요 외에도 '까고 보니 전라도라! 광주 조폭 출신이라는 윤중천' '광주 조폭 출신 건설업자에게 걸렸으면 뼈 하나 추리기도 힘들겠네요.' 등의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분명 악의적이자, 도를 넘어서는 '호남 비하'로 봐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광주가 아닌 충북 제천 출신으로 호남에 연고가 없는 인물이며, 조직폭력배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50대 여성사업가 K씨의 부탁을 받은 박씨 역시 광주 출신이 아니며, 조폭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호남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와 장·차관, 외청장 인사에서 이명박 정권보다 더한 홀대를 당해 심각한 상실감에 빠져 있다. 이런 마당에 호남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니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사이버상에는 5·18에 대한 사실 왜곡은 물론 사건이 떠질 때마다 호남 비하로 몰고 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경찰청이 "현재로는 수사 방침이 없다"거나 "본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명예 훼손이자 범법행위임을 인식, 해당 네티즌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

정부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검·경을 동원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라도 비하 카페' 및 해당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롯데 광주월드컵점 임대료 현실화해야

광주시가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의 시유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재협상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 측이 시에 납부한 임대료보다 롯데의 재임대 수입이 더 많은데다 개점 후 5년 동안 매출액이 2배 이상 뛰었음에도 임대료는 동일한데 따른 것이다.

강운태 시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광주시에 임대료를 내는 롯데 광주월드컵점이 일부 시설을 재임대해 받는 수입이 시에 납부한 임대료보다 많은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월드컵점의 실태를 정밀조사해 바로 잡도록 지시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45억 8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롯데마트로 하여금 월드컵점을 오는 2027년까지 운영토록 한 계약에 따라 현재도 동일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월드컵점은 작년에 재임대 수입만 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일부 시설의 재임대만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 운영 이익과는 별도로 1억2000만 원의 임대수익까지 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월드컵점은 개점 후 5년 동안 매출액이 2배 이상 뛰었는데도 임대료는 똑같이 내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점 첫 해 1025억 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2202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나 지금까지 임대료는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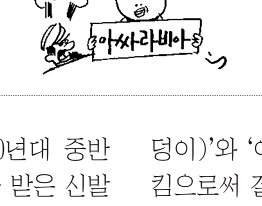
이처럼 매출액 증가에도 임대료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광주시가 애초 계약 당시 '광주 월드컵점의 1년 매출액이 3000억 원을 웃돌 경우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일반상가 임대료 산정법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가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공익 차원의 명분이 큰 만큼 임대료를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 롯데마트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임대료 인상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아싸라비아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지난 1996년 문명사적 관점에서 국제질서의 변화를 분석한 명저 '문명의 충돌'에서 "앞으로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급부상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냉전 이후 세계정세의 변화를 해석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긴 하지만, 총칼이 아니라 상품과 문화를 앞세운 '돈의 전쟁'이 펼쳐지는 최근의 상황에도 꼭 들어맞는 탁견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거대한 시장과 강력한 결속력을 발판삼아 세계 문명사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이슬람권 국가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기업인 나이키가 1990년대 중반 '알라를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은 신발을 전량 리콜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나이키는 'NIKE AIR BAKIN'이라는 농구화를 출시하면서 신발 앞과 뒤에 'AIR'라는 단어를 불꽃처럼 변형한 로고를 새겨넣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로고가 아랍어 '알라(ALLAH)'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나이키는 곧바로 이슬람 단체들의 격렬한 저항과 불매운동에 부딪혔다.

나이키는 알라신을 모독했음을 공개 사과하고, 로고가 새겨진 3만8000켤레를 모두 리콜하는 한편, 해당 모델의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이슬람권의 거센 분노를 달랬다.

월드스타 싸이가 부른 '강남스타일'의 후속 곡으로,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신곡 '아싸라비아'가 아랍 비하 논란에 휘말려 제목과 가사를 바꾸기로 했다는 보도다. 우리말로는 별다른 의미 없이 흥겨움을 나타내는 감탄사인 '아싸라비아(assaravia)'가 욕설을 의미하는 '애스(ass·엉덩이)'와 '아라비아(aravia)'를 연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랍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전세계가 지구촌으로 통합된 지금, 상대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